

〈제 540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성년의 날 맞은 직원 축하 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지난 20일 오전 본점 은행장실에서 성년의 날을 맞은 직원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으로 입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을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아차 광주공장

◆ 창립기념일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 임직원들은 지난 22일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고객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후된 어린이공원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박래석 공장장과 임직원,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서광어린이공원과 오월어린이공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

◆ '썰라티' 리무진에 OE 공급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지난 21일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리무진 '썰라티'에 20인치 규격 OEX(신차용 타이어)를 단독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썰라티 리무진에 들어가는 제품은 기존 포트란 KC53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포트란 KC53은 금호타이어의 LCV(경상용차) 전용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마일리지 향상 및

이상마모 방지, 내구성 향상,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장년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본회(회장 최상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21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상설채용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에게 구직 상담 및 면접을 통한 현장매칭 서비스를 제공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워크숍〉

본회(회장 최상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은 지난 22~23일 이틀간 광주·전남 일원에서 기업형 드림청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수기업 탐방과 함께 다양한 직무분야의 현장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미션 수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참여청년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제1443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5월24일(금) 오전7시에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국무총리)를 초청하여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이 답이다」란 주제로 제144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우리경제의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다”면서 그 해법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운영의 기본원리 또는 철학을 말한다면서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부자,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고,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국 일지 (5.20 ~ 5.24)

5.20 (월)	● 조선대 미래융합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참석	5.22 (수)	● 중장년 제9회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 중장년 고용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워크샵(~23)
5.21 (화)	● 중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5.24 (금)	● 제1443회 금요조찬포럼

1. 노사 동향

■ 정부는 5. 13 '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계획 발표

○ 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입법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위원회」(5. 8)와 「연구위원회」(5. 10)를 개최해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협의한 가운데 본격적인 심의는 예년과 같이 6월 말 ~ 7월 초에 집중될 전망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퇴의사를 재확인(5. 9)함에 따라, 고용부는 새로운 공익위원 8명의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

※ 총 9명의 공익위원 중 고용부 소속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퇴

○ 한편, 정부는 300인 이상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7. 1)을 앞두고 최근 발생한 버스업종 노사 갈등 사태와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 고용부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파악했으나, 방송,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버스업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19. 4월 기준 총 1,051개소

-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노사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 지원 방침

■ 정부의 근로감독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고용부는 2018년 산업재해 감소 실적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산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종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2018년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1명으로 2017년(0.52명) 대비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 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971명으로 2017년(964명)보다 증가

- 2018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290명)가 건설업종 산재 사망자(485명)의 6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5. 13 ~ 5. 31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 실시 계획

○ 고용부는 금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불량 적발 시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

-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

■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우리나라의 노사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 표명

○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표명

※ 간담회에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를 비롯한 21개국 회원국 대사 및 부대사 24명 참석

○ 경총은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황과 특수성 설명

- 또한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버스업종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으로 부각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당초 노조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5. 15 총파업 예고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버스 업종이 제외됨에 따라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19. 7. 1 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

-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가 버스요금 인상 및 준공영제 확대 실시 등에 합의하고 버스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과 정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버스노조는 파업을 철회 또는 유보

- 버스노사는 ▲임금인상(서울 3.6%, 부산 3.9%, 대구 4.0%, 인천 3년간 20%), ▲정년을 63세로 연장(서울, 대구, 인천, 울산, 창원) 등에 합의

※ 울산 지역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5. 15 오전 5시경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당일 오전 8시20분경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파업 철회

[참고 1] 전국 버스 노사 임단협 진행 상황

구분	주요 내용
대구	▲5. 13 타결
인천, 광주, 전남	▲5. 14 타결
서울, 울산, 경남	▲5. 15 타결
부산	▲ 시내버스 : 5. 15 타결 ▲ 마을버스 : 5. 14 → 5. 29 조정기간 연장
대전, 경기, 충남, 세종	▲ '노동자종합복지센터' 2021년까지 25곳 설립 ▲ 서울 시내 '노동자쉼터' 5곳으로 증설 ▲ 무료 노무 컨설팅 '마을노무사' 150명으로 확대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청주	▲ 근로자 '작업중지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7월까지) ▲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조사관' 도입